

224

1988 . 10 . 14 .

: 2

:

163

168

171

.

.

勞動對策會議 規程(國務總理 訓令)廢止建議에 대한 檢討

1. 檢討經緯

- 0 勞動對策會議規程(81.12.1國務總理訓令 第171號)에 依據
中央 및 地方에 勞動對策會議를 設置, 勞使問題에 대하여
關係機關이 共同對處 할 수 있는 體制를 마련
- 0 최근 野黨 및 一部 勞動團體에서 對策會議를 勞動運動
彈壓機構라고 비난, 關係部處로 부터 위 訓令에 대한
廢止建議가 있어 이에 檢討 報告함

2. 訓令의 主要内容

0 目 的

關係機關과의 協調를 통하여 다음事項을 効率的으로 對處

- 勞使紛糾 豫防 및 解決對策
- 勞使問題의 誤導 및 擴散防止 對策
- 勞使問題에 대한 第3者 介入 防止對策
- 기타 社會物議를 惹起 할 우려가 있는 勞動問題 解決對策

0 設 置

- 中央勞動對策會議 (委員長 : 勞動部長官)

- 安企部, 大檢察廳 등 公安部處次長과 6個部處 次官으로 構成
- 實務會議는 勞動部次官(委員長) 및 13個部處 局長으로 構成

- 地域勞動對策會議 (委員長 : 市·道知事)

- 地域內 安企部, 檢察廳, 警察局, 勞動官署의 長으로 構成
- 實務會議는 市·道 副知事(委員長) 및 地域勞動對策會議 委員長이 委囑하는 委員으로 構成

- 市·郡·區 勞動對策會議 (委員長 : 市長, 郡守, 區廳長)

- 委員은 委員長이 委囑

3. 廢止建議 理由 (勞動部)

0 勞使紛糾는 法節次에 따라 勞動委員會 등의 專門機關에서 調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勞動對策會議 機能에 한계가 있고

0 特定 勞使紛糾의 성격상 關聯部處의 協調가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部處間의 一般的인 協調體制를 活用하여 對處할 수 있음

4. 關係部處 意見

- 0 不法爭議 防止를 위한 關聯部處間 協調體制 強化方案 討議時 (88.9.30) 勞動對策會議規程 廢止에 대한 關係部處 意見
 - 國家安全企劃部, 大檢察廳, 治安本部: 廢止하는 것이 妥當
 - 經濟企劃院, 財務部 등 其他部處: 異見 없음

5. 當室 檢討意見

- 0 中央의 경우 필요시 關係部處 長官會議 등을 통해 勞使問題 對策을 協議하고 있어 同 規程에 의한 대책會議는 別로 活用하지 않는 實情임
- 0 또한 今年 臨時國會(第143回)에서 勞動對策會議가 野黨의 주된 攻擊對象으로 부각되면서 野黨 및 일부 勞動團體에서는 일부 事件에서 부각된 바 있는 關係機關 對策會議와 같은 시각에서 評價하려는 경향이 있으며,
安企部 關係官이 委員으로 規定되어 있고 地域內 情報機關 關係官이 참석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勞動行政이 公安·治安 次元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對政府 不信 및 非難의 素地를 提供할 우려가 있음
- 0 訓令이 없다 할 지라도 關係部處 長官會議등을 통해 勞使問題 對策을 協議하고 있으며 특히 "不法行爲 防止를 위한 關聯部處間 協調體制強化方案"이 마련된 바(88.9.30) 있으므로 勞動對策會議規程(總理訓令)은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함